

# 유고슬라비아 전쟁 및 난민과 세르비아 노동시장

**Nemanja Cocic** (Consultant for World Bank and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 머리말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지속된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80만 명 이상이 세르비아로 이주하여 정착했는데, 이는 세르비아 전체 인구의 약 9분의 1에 해당한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은 세르비아의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난민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추론을 내리는 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난민의 세르비아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난민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 유고슬라비아 건국과 해체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1918년에 건국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추축국에 의해 점령 및 분리되었던 1941년까지 존속했다.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민족 집단 간의 적대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더욱 심화되었지만, 유고슬라비아 전역에서 활동하던 저항 운동 조직인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지도자이자 1945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을

세운 독재자 티토의 철권에 의해 잠잠해졌다.<sup>1)</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여 고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했다.

유고슬라비아는 어느 정도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었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1991년 유혈사태로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의미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 유고슬라비아 구성 공화국 간 상당한 경제발전 수준 격차, 정치적 개혁을 둘러싼 정치 엘리트 간의 이견, 과거사에서 비롯된 여러 민족 집단 간 신뢰 부족 등이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록의 <부표 1>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적 쇠퇴가 각 공화국에 불균등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은 현재는 모두 독립국가인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던 6개 공화국의 지도이다.

[그림 1] 유고슬라비아 6개 공화국



1) 유고슬라비아의 국가명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국가명은 1963년부터 1991년 해체 전까지 사용되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이다.

## 1991~1995년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1991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1992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에서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 및 독립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열렸다. 두 공화국 모두에서 세르브인<sup>2)</sup>이 국민투표에 불참하며 자치 독립을 선언했다.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자 1991년 봄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몇 개월 후 보스니아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결국 세 민족집단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 데이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전쟁은 종식되었다. 세르비아 난민·이민청(KIRS)과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로 이주했고, 그중 53만 7,939명이 세르비아에 난민으로 등록되었다(KIRS and UNHCR, 1996). 안타깝게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1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ICTJ, 2009). 1991년 전쟁 초반부터 난민들의 세르비아 이주가 시작되었고 전쟁 초반과 종전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의 난민이 이주했다.

## 1998~1999년 코소보 전쟁과 2004년 코소보 소요사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 뒤 알바니아 다수민족이 세르비아 남부 코소보에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또 다시 전쟁이 촉발되었다.<sup>3)</sup>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세르비아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하자 세르비아군은 코소보에서 후퇴했고, 곧 대규모의 세르비아 난민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중부로 이주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민족적으로 자행된 세르브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약 20만 명의 세르브인이 코소보를 떠났다(Human Rights Watch, 2004). 2년에 걸친 코소보 전쟁에서 1만 3,500

- 2) 1991년 유고슬라비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세르브인은 크로아티아 인구의 12.2%, 보스니아 인구의 31.2%를 차지했다.
- 3) 세르비아가 알바니아 민족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코소보 지역은 아직도 분쟁에 휘말려 있다. 국제적으로 117개 국가가 코소보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5개 EU 회원국을 포함한 97개국을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ICTJ, 2009). UNHCR은 2000년 기준 세르비아 내 코소보 출신 난민이 18만 7,129명인 것으로 기록했다(UNHCR, 2011). 2004년에는 알바니아 민족 내 소요사태로 인해 또 한 차례 세르브인이 코소보를 떠나야 했다. 2005년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에서 총 20만 9,021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했다(KIRS, 2021).

## ■ 현재 세르비아 노동시장

세르비아 공화국은 남동유럽에 해당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이다. 세르비아의 인구는 현재 분쟁 지역인 코소보를 제외하면 약 680만 명이다(SORS, 2021). 2021년 구매력 기준(PPP) GDP는 약 1,343억 달러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0.9%였으나 2021년에는 7.4%를 기록했다(The World Bank Data, 2022). 2022년 1분기 실업률은 10.6%이며 2012년 25.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SORS, 2022b). 2022년 1분기 월 평균임금은 세르비아 통화로 74,168디나르(RSD), 미화로는 648달러이다(SORS, 2022a). 세르비아의 노동시장은 고숙련 노동력이 충분한 수요로 흡수되지 않아 공급과잉 상태인 것이 특징인데(Marjanović et al., 2017), 반면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TS, 2021).

세르비아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제조업(19.7%), 농림수산업(14.9%) 및 도소매업(14.1%)이다. 평균임금은 정보통신부문이 17만 5,091디나르(약 1,529달러)로 가장 높다(SORS, 2022a). 세르비아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체 취업자의 약 3분의 1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은 고숙련 노동 편향적이며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SORS, 2022a).

현재 세르비아는 EU 가입 후보국이지만 세르비아의 EU 규정 이행이 제한적이고 코소보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세르비아 정부가 EU의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서 EU 가입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

## ■ 세르비아 노동시장의 난민

난민의 세르비아 노동시장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난민들은 세르브인으로서 세르비아 국민과 문화적 규범 및 언어를 공유한다. 둘째, 과거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의 교육제도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정 학력과 직업 사이의 연계가 일치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도 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온 난민은 세르비아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1992년 난민법에 따라 이들도 취업은 가능했지만 시민권 없이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RS Official Gazette, 1992). 둘째, 세르비아의 노동시장은 국가 경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1992~1996년과 1998~2001년에 걸쳐 세르비아에 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상당한 개혁 과정과 고충을 겪고 있었다.<sup>4)</sup>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세르비아 경제는 초인플레이션<sup>5)</sup>과 실업 확산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1990년대 초 세르비아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포괄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영화 과정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실업이 증가했다(Vujačić and Petrović-Vujačić, 2011).

세르비아 노동시장에서 난민은 제도적으로 집시, 장애인, 인신매매 피해자 등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난민은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Lukić, 2016).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르비아 내 난민의 상당수가 평균 10년 이상 실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Ladević and Stoilković, 2004; KIRS, 2008). 또한 난민은 세르비아 국민에 비해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고용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bović et al., 2007). 대부분의 난민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받았으며, 난민 중 51%는 임시직, 38%는 상시직에 고용되어 있었고 8%는 자영업자였다(KIRS, 2008). 따라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난민의 비공식 경제부문 활동 비율이 세

4)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및 미국의 제재조치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공화국으로 속해 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시기에 내려졌다. 이러한 제재는 유고 연방이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한 것 때문이었다. 1998년 제재는 세르비아가 알바니아 민족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려졌고 2001년 1월에 해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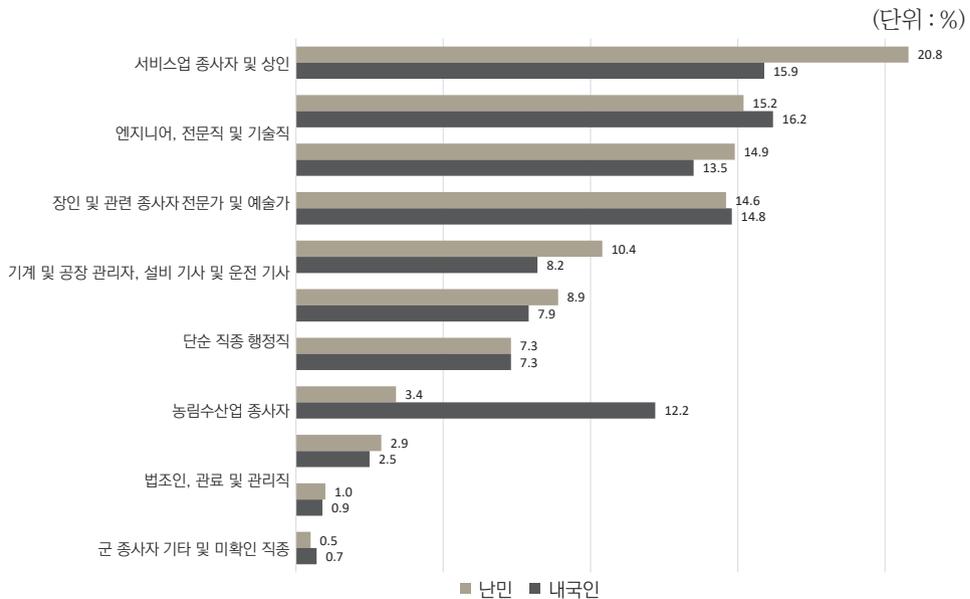
5) 1994년의 일간 인플레이션율은 65%로 34시간마다 물가가 2배로 올랐다.

르비아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KIRS, 2008).

세르비아 국민보다 더 경쟁력이 높은 학력을 지니고 노동시장에서 더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실업률은 높다(Babović et al., 2007). 2001년과 2011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 난민의 실업률은 10년 사이 35.8%에서 24.2%로 감소했지만 세르비아 국민의 실업률(22.3%)보다는 여전히 높았다(Lukić, 2016). 이 연구는 난민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잠재적 이유 중 하나로 난민이 보고한 상대적으로 나쁜 건강상태를 들고 있다(Lukić, 2016).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난민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나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구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했다(Babovic et al., 2007). 경제활동 중인 난민 가운데 창업을 한 비율은 8.1%로 세르비아 국민(6.7%)보다 높았다(Lukić, 2016). [그림 2]는 난민 및 내국인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및 상업에서 내국인보다 난민 종사자가 많다. 흥미롭게도 난민이 창업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그림 2] 직종별 난민 및 내국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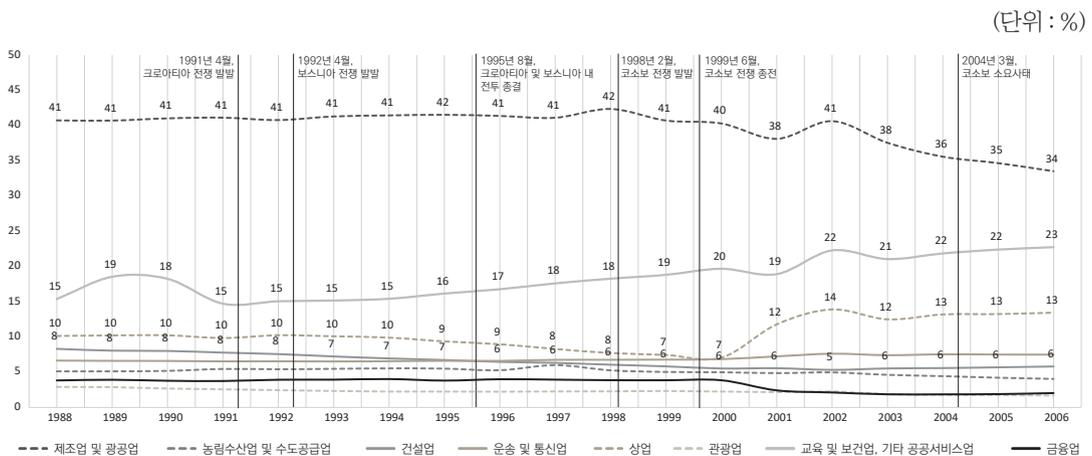
자료 : Lukić(2016), "Integracija prisilnih migranata iz bivših Republika SFRJ na tržište rada u Srbiji", *Demografija*, 13, p.91.

난민이 되기 전보다 난민이 된 후에 더 높다(Babovic et al., 2007). 또한 난민이 수용국가 국민에 비해 창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edojević-Despić and Lukić, 2019).

[그림 3]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난민의 노동시장 유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각 경제부문별 총고용 점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김정 수직 실선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주요 사건을 나타낸다.

크로아티아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교육, 보건 및 공공서비스 부문이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르비아 시민권이 없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출신 난민은 공공부문에 고용될 수 없었고,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인의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시 널리 알려졌던 바와 같이 대량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부문 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소보 전쟁이 종식된 1999년 6월 세르브인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중부로 이주한 시기에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시기부터 상업 부문(도소매업)의 고용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난민의 창업 활동이 내국인보다 더 활발했던 것을 보여준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효과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출신 난민의 유입 이후에는 포착되지 않았는데, 2001년까지 이들 대부분이 세르비아 시민권을 얻지 못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3] 부문별 고용 점유율 추이(1998~2006년)



자료 : SORS(2022c),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Republic Serbia, from 1988 to 2006”, <https://www.stat.gov.rs/> (2022.9.4).

## ■ 난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

난민 이주와 세르비아의 고용률 및 임금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해보자면 우선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출신 난민으로 인한 노동 이주의 충격은 세르비아의 비공식 경제 확대에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공급 충격은 여러 학력 집단 중 한 집단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으며, 난민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그 잠재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Borjas and Monras, 2017).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공공부문 취업에는 법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출신 난민의 공급 충격이 민간부문 고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했다가 세르비아로 다시 이주한 난민이 많기 때문에 난민이 독일에 임시로 머물며 익힌 기술을 세르비아에서 활용하면서 경제 성과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sup>6)</sup>

## ■ 맺음말

안타깝게도 난민이 세르비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1992년(당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부터 2000년까지 세르비아에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포괄적인 경제 개혁, 1992년부터 2003년에 걸친 몬테네그로와의 복잡한 관계 등 여러 복잡한 요소 때문에 난민과 노동시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와 난민의 세르비아 노동시장 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난민이 ①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② 임금을 늦게 또는 불규칙하게 받

6)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Bahar, D., A. Hauptmann, C. Özgüzel and H. Rapoport(2022), "Migration and Knowledge Diffusion: The Effect of Returning Refugees on Export Performance in the Former Yugoslavi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1~50.

고, ③ 비공식 경제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난민의 고충과 미흡한 제도적 지원이 난민들에게 창업의 동기가 되었고 사업 운영을 위해 다른 난민들과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에 의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Lukić and Stoilković, 2017). 실제로 난민들은 서비스 및 상업 부문에서 중개인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난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통합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빈곤한 지위에 처한 난민이 귀중한 개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LI**

---

---

## 참고문헌

---

---

- Babovic, M., S. Cvejic and D. Rakic(2007), *Polozaj izbeglica na trzistu rada i ucesce u aktivnim merama zaposljavanja*, Beograd : Grupa 484.
- Bahar, D., A. Hauptmann, C. Özgüzel and H. Rapoport(2022), “Migration and Knowledge Diffusion : The Effect of Returning Refugees on Export Performance in the Former Yugoslavi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1~50.
- Borjas, G. J. and J. Monras(2017), “The Labour Market Consequences of Refugee Supply Shocks”, *Economic Policy*, 32(91), pp.361~413.
- Human Rights Watch, “Kosovo/Serbia : Protect Minorities from Ethnic Violence”, 2004.3.18.
- ICTJ(2009), “Transitional Justice in Former Yugoslavia”, <https://www.ictj.org/> (2022.8.3).
- KIRS(2008), “Stanje i potrebe izbegličke populacije u Republici Srbiji”, <http://arhiva.kirs.gov.rs/> (2022.8.28).
- \_\_\_\_\_(2021),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https://kirs.gov.rs/> (2022.8.1).
- KIRS and UNHCR(1996), “Popis izbeglica i drugih ratom ugroženig lica u Saveznoj Republici Jugoslaviji”, <https://kirs.gov.rs/> (2022.9.20).

- Ladević, P. and V. Stanković(2004), *Избеглички корпус у Србији према подацима пописа становништва 2002*, Beograd : Ministarstvo za ljudska i manjinska prava Srbije i Crne Gore.
- Lukić, V.(2016), “Integracija prisilnih migranata iz bivših Republika SFRJ na tržište rada u Srbiji”, *Demografija*, 13, pp.83~93.
- Lukić, V. and M. A. Stoilković(2017), “Interrelation of Spatial Disparities in Development and Migration Patterns in Transition Economy : Serbia - Case Study”, *Human Geographies*, 11(1), pp.65~76.
- Marjanović, G., L. Maksimovic and V. Mihajlović(2017), “STRUKTURNE NEUSKLAĐENOSTI NA TRŽIŠTU RADA U REPUBLICI SRBIJI”,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nd Management – EMAN 2017*, pp.284~293.
- Predojević-Despić, J. and V. Lukić(2019), “Entrepreneurship as a Mode of Integration : Experiences of Former Refugees in Belgrade, Serbia”, *Glasnik Etnografskog instituta*, 66(3), pp.641~655.
- RS Official Gazette(1992), “Law on Refugees”, <https://www.refworld.org/> (2022.9.20).
- RTS, “Koje poslove skoro niko u Srbiji neće da radi, pa radna snaga mora da se uveze”, 2021.11.2.
- SORS(2021), “Census 2002 Data”, <https://data.stat.gov.rs/> (2022.8.5).
- \_\_\_\_\_ (2022a), “Average Wages Across Sectors”, <https://data.stat.gov.rs/> (2022.9.15).
- \_\_\_\_\_ (2022b). “Labor Force Survey for the 1st Quarter 2022”, <https://publikacije.stat.gov.rs/> (2022.9.15).
- \_\_\_\_\_ (2022c),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Republic Serbia, from 1988 to 2006”, <https://www.stat.gov.rs/> (2022.9.4).
- The World Bank Data(2022), “GDP, PPP (Constant 2017 International \$) - Serbia”, <https://data.worldbank.org/> (2022.8.7).
- UNHCR(2011), “UNHCR Global Appeal 2011 - Serbia”, <https://www.unhcr.org/> (2022.9.15).
- Vujačić, I. and J. Petrović-Vujačić(2011), “Privatization in Serbia : Results and institutional failures”, *Economic Annals*, 56(191), pp.89~105.
- World History Commons(2022), “GDP in Yugoslavia : 1980-1989”, <https://worldhistorycommons.org/> (2022.8.7).

## 부 록

### <부표 1> 유고슬라비아의 1인당 GDP

(단위 : 1972년 기준 미국달러)

	1980년	1989년	증감(%)
유고슬로비아 전체	17,764	16,820	-5.3
슬로베니아	35,320	33,103	-6.0
크로아티아	22,505	21,238	-5.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1,722	11,424	-2.5
몬테네그로	14,034	12,398	-11.7
세르비아	17,453	17,429	0
보이보디나 자치주	20,029	20,063	0
코소보 자치주	5,013	4,317	-13.9
마케도니아	11,946	10,891	-8.8

자료 : World History Commons(2022), "GDP in Yugoslavia : 1980-1989", <https://worldhistorycommons.org/> (2022.8.7).